

# 2016 통일교육 지침서

2016 통합용

##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 02-901-7114 F 02-901-7029  
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합용



2016  
**통일교육**  
지침서

## Part 1

### 통일교육 지도방향

1. 통일교육의 목표 .....	06
2. 통일교육의 주안점 .....	08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	11
4. 학교급별 통일교육 지도방향 .....	15

## Part 2

###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	26
2. 북한 이해 .....	40
3. 통일환경의 이해 .....	55
4. 통일정책 .....	58
5. 통일을 위한 과제 .....	67

## Part 3

### 부 록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	72
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	82
통일교육지원법 .....	91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	95



**Part 1**  
**통일교육 지도방향**

1.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의 주안점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4. 학교급별 통일교육 지도방향

##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 미래지향적 통일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된 미래지향적 통일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키우도록 해야 한다.

### 나. 건전한 안보관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의 기초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일체의 안보위협 요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제반 가치와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는데 있다.

따라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통일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 다. 올바른 북한관

올바른 북한관이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을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북한 주민은 통일미래의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상대이지만, 북한 체제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해 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통일교육의 주안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의를 심어주고,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족사적 당위성에 더하여 통일이 국가뿐 아니라 개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줄 때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의를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바람직한 통일의 달성은 우리가 얼마나 통일의를 다지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일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일의지 결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면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통일은 단순한 제도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통일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형태와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방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 라.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

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마.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한반도에는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할 때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바.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이 같은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직시하고, 북한을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억압적 통치와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을 길러주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적절한 지도방법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도방법은 대상의 특성(수준, 관심 등)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내용전달을 위한 효율적 방식 선택, 효과적인 기자재의 적절한 활용 등을 포함한다.

### 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나아가 해당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통일·북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전달은 학습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나.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대화와 토의의 문화 정착은 통일의 선결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일방향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열린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와 토의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습득하게 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또한 열린 대화와 토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여 통일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통일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학습자들은 세대나 연령, 성별, 계층, 직업, 거주지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맞춤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즉 연령, 학력, 직능, 성별에 따

라 적절한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적합한 교수 기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놀이·체험형이나 문화·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통일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식·정보의 전달이나 자율적 탐구를 통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통일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인 대상 통일교육은 실질적인 직무 수행과 연관된 맞춤형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통일교육의 대상이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 기법이 바람직하다. 현안 쟁점이나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은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및 통일 사례, 우리 역사상의 통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등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강의식 교수법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율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수 기법이 가미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통일교육으로 여기에는 게임, 퍼즐, 퀴즈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 협동학습(Teams Games Tournaments), 최적방안찾기(Plus Minus Reconstruction, PMR),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 수업, 신문 활용 교육(NIE : Newspaper in Education),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다.

셋째,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다.

넷째, 북한 지리나 풍습에 관한 가상체험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다.

다섯째, 오두산 통일전망대 · 통일관 · 남북출입사무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견학 등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초청 강연이나 대담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교육원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교육도 강의식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덟째,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웹 자료, VOD, CD 등을 활용한 통일 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을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 · 분석하기, 통일문제와 관련한 웹토론을 통해 합의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 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북한 생활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된다.

아홉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행사 등을 통일축제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 통일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4. 학교급별 통일교육 지도방향

### 가. 교과과정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 및 주안점을 바탕으로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 과정에 적합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새로운 통일교육 교수방법과 학습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 · 활용하고 문화적 · 감성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각 교과 단원에서 학습 요소를 찾아내어 계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 자료는 시사성, 정확성, 신뢰성에 기초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교 통일교육 콘텐츠, 멀티미디어 자료 등 통일교육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개요

### ■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에게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서와 가치관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감성 중심으로 계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교과 통일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내용과 관련한 아동 문학작품이나 영상자료들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감성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며 북한의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언어와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분단의 아픔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 ■ 중학교

중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자아개념이 특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런 특성을 지닌 중학생들에게 통일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가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민족공동체 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다루는 문예 작품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문제가 민족은 물론 개인의 삶과 관련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과정을 이해할 때 분단이 국제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아울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조사·탐구학습, 다양한 통일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중학생들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통일 지향적인 가치관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특히,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평화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더 나아가 남북한 주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의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 ■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내재된 민족공동체 의식과 중학교 때 습득된 통일·북한 관련 지식을 토대로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심도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통일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쟁점이 되는 통일·북한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책을 구상해 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통일시대에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대비 능력과 통일 의지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 아니라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유·평등·민주·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북한 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2) 도덕교과

### ■ 초등학교

- ①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또한 분단극복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분단의 과정과 민족의 아픔, 분단비용 극복 등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인식시킨다.

- ② 고학년의 경우,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한 통일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이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게 한다.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과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

### ■ 중학교

- ① 통일이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분단이 국가와 민

족, 그리고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우선,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단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으로써 남북한 분단체제가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한다.

이와 반대로, 통일을 통한 실용적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보게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킨다.

- ② 장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남북 간의 이질화된 현실 속에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 인권문제 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임을 알게 한다.
- ③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통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보게 한다.

###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구촌 시대의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통일방법과 통일비용, 통일편익을 설명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에 따른 제반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3) 사회교과(일반사회 영역)

### ■ 중학교

오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설명하고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의 극복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사회) 통일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독일이 통일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여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법과정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민족 통일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고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교과(역사 영역)**

■ **초등학교**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등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6·25전쟁의 원인 및 피해상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평화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 **중학교**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통일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이해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광복과 한반도 미·소 분할점령,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국제교류의 확대 등을 설명하며, 꾸준히 전개되어 온 평화통일 노력을 인식시킨다.

■ **고등학교**

(한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 등을 탐구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탐구하고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제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실상, 남북한 간 전개된 화해와 협력 노력 등을 파악하게 한다.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에서의 이념 대립과 분단을 파악하여 국가 간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영향을 설명한 후 경제성장 과정 등을 비교하면서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한다.

**5) 사회교과(지리 영역)**

■ **중학교**

북한의 개방 지역·백두산·비무장 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토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국토계획을 찾아보게 하는 등 국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시키도록 한다.

(경제지리) 통일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토계획 수립방안을 설명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이해시킨다.

## 6) 국어교과

### ■ 중학교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 극복방안으로 정치 체제나 이념을 초월하여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함을 인식시킨다.

###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여 민족 통일에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함을 일깨우도록 한다.

(국어Ⅱ) 남북한의 언어와 동질화 문제를 다루어 국어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탐구하도록 한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활동, 학교 축제를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 개인별 또는 학교별 봉사 활동, 수학여행, 백일장 등 다양한 학교행사 활동을 통일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같은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 주민을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활동이다. 학교에서 통일 관련 시사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그들의 관심영역에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학교 행사에서는 통일 가요제, 통일 마라톤 대회, 통일 문예대회, 통일 퀴즈 대회 등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 관심과 의지를 드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장체험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나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오두산 통일전망대·남북출입사무소·관문점·한반도통일미래센터·통일전망대·비무장지대(DMZ)·통일관 등을 견학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한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통일·북한 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도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통일·북한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등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교육원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다.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에서는 학습효과를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접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양도록 정보를 적절히 여과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북한의 제도와 정책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의 시행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북한 관련 자료들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교육 관련 자료 탐색과 학생들의 과제 작성, 수업 과정에서 웹 기반 통일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민간 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영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 교사가 사전에 검증한 후 학생들이 접근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Part 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 1 통일문제의 이해

## 가. 통일문제의 성격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일외교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인식시킨다.

##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남북한 간에는 상호대립과 갈등이 증대되었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게 된다.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면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통일도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졌던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했다.

## 나. 분단의 배경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배경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이해시킨다.

분단의 과정이 지리적 분단에 이어 정치적 분단, 그리고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진 점을 설명하고,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음을 인식시킨다.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 남북분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치열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우리 민족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

에서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고, 독립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 지역에서는 이미 중앙정부 격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2)와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1947.2)가 차례로 설치되었으며, 헌법 초안이 작성되는 등 독자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하였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상호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은 장기화되었다.

**다. 분단의 폐해**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분단이 초래하는 다양한 폐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시킨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삶과 국가·민족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분단이 민족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분단의 폐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단은 남북한 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분단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분단은 수많은 이산가족과 납북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 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역량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해 발전했음을 이해시킨다.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량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5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시장원리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개방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1962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대외 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 하에 수출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1974년에 국내총생산 100억 달러, 1986년에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사회는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민주화를 진전시켜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당을 비롯한 이익 집단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통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시민사회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와 발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열에 합류했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명을 충족하는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도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한류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발전된 우리나라의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였다.

#### 대한민국의 강화된 역량은 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향후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통일국가의 이념체계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자유·평등·복지 등

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과정을 중시한다.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역시 민족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마. 통일의 필요성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사적 측면과 인도주의적 차원, 실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시킨다.

통일이 개인의 삶과 국가적 발전, 국제 평화적 측면에서 필요함을 종합적으로 인식시킨다. 특히 통일을 통해 얻게 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0년 가까이 이어진 남북 분단은 민족 구성원 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 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이다.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 실현 차원에서 중요하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통일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여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 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남과 북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 경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 이후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의 위험 등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바. 통일비용과 편익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비용을 분단비용 및 통일편익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임을 인식시킨다.

통일비용은 소모적 비용과 이익으로 환수되는 투자성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 통일비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통일준비 정도에 따라 통일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도록 한다.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통일의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통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다.

통일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그리고 이질적인 주민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미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성 비용이다.

통일에 따른 비용은 북한 지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투자이며, 이는 남북한이 각각 보유한 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편익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다.

분단비용은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대표적으로 방위비나 체제경쟁을 위한 외교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이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지속적 성격이 있는 반면, 통일비용은 통일 전후 시점에 발생하는 한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많다.

통일은 통일비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통일편익을 가져온다. 통일로 인해 분단비용 해소,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의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위험 해소 등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한다.



이러한 통일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얻게 되어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통일비용이 더 큰 통일편익을 가져오기 위한 투자라는 점과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을 이유로 통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라 하겠다.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는 어떻게 하면 초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사. 통일의 기본구상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의 통일 방식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접근이며, 1989년 이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분단의 장기화와 이질화를 생각할 때,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을 인식시킨다.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남북간 신뢰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다.

우리의 통일 기본구상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1989년 9월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유지되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 바탕하고 있다.

#### 먼저, 통일은 남북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통일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갈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 통일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문제를 국민적 합의와 신뢰 속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무엇인지, 통일이 가져올 효율과 편익은 무엇인지, 여기에 투입될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은 남북만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 통일국가의 미래상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미래지향적이며 열린 민족공동체의 형성임을 인식시킨다.

통일한국은 개인의 삶과 국가·민족·국제적 측면 모두에서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시킨다.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한국은 미래지향적 민족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후 70년 이상 이질화 과정을 거쳐 온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세계화, 다문화 시대로 인해 민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오늘날에는 남북한 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타민족 구성원 모두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민족공동체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 통일한국은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통일한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 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복지국가이어야 한다.

#### 통일한국은 구성원은 활동 영역의 확대와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 북한에 대한 인식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협력의 대상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북한의 체제선전·주장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점, 북한 사회와 주민의 변화 모습 등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한다.

#### 북한 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 북한은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균형있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한다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하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고,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남

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을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 당국의 주장이나 북한의 신문, TV방송 등은 체제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 사회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핵개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북한을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나. 북한의 정치와 외교

####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 체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개인을 우상화하고,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이를 아우르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임을 지적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노동당에 의한 일당독재체제이며, 수령 1인의 유일독재 체제임을 이해시킨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이를 아우르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2000년대 이후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9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더불어 지도적 지침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2012년 4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아우르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여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북한은 수령 독재 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독재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1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 조직 및 기구가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유일지배 이념을 통해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한 선군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국가 체제에서 당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국가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국가 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운영하면서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해 부심해 왔으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보위하는데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 2) 북한의 대외 정책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핵실험 등에 대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2.12.)에 이어 4차 핵실험(2016.1.6.)을 감행함으로써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불안감과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다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 체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다.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왔음을 주지시킨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필수조건임을 이해 시킨다.

#### 북한은 악화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전 이래 군수공업의 발전에 집중하여 왔으며, 장거리 포, 미사일 등의 각종 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등 꾸준히 무력 증강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꾸준히 실험 및 개발하고 보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등에서 교육받은 핵개발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영변에 원자로를 가동하는 등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연료 확보에서 핵 폐기물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 중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북핵 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수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라. 북한의 경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경제체제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시장화현상이 확대되어 있는 이중체제임을 구체적 사례를 들며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내용과 북한경제에 초래하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킨다.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제한적인 대외개방만을 시도하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게 한다.



**북한경제는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고수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초래된 경제난으로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군수기업과 특급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배급제가 붕괴됨으로써 북한경제 전반에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경 시작해, 오늘날에는 유통, 소비, 생산, 노동, 금융, 대외무역, 부동산 분야 등 북한경제 전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국영기업소와 공장, 협동농장들이 시장을 활용해 계획지표를 달성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사경제 활동을 통해 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유화 현상도 등장함에 따라 제도와 경제현실이 괴리된 경제체제의 이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김정은정권은 국가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국방부문에 우선 배분하는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김정일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는 경제정책 기초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우선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계승·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이른바 김일성 사회주의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국가재원을 군수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민생경제는 사실상 자력갱생 원리에 맡기는 이원화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초래해 외부자본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내부자원 동원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민수산업의 활성화와 경제난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대외개방만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김정은시대 들어와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화 현상을 부분 제도화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체제생존에 필요한 재화의 수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제특구 위주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즉 1991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2011년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 2013년 이후 21개 경제개발구(2015년 12월 현재)를 개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제특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북한 리스크의 증대, 열악한 인프라, 시장경제 시스템의 부재,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 등 요인들이 북한의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마. 북한의 사회·문화

###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북한사회 저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탐색해 보도록 한다.

####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배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 집단화해 왔으며, 외형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경제활동의 시장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돈과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적 사고가 확산되어 집단주의 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정보와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과 한국 등 외부 실정에 대한 정보 유입이 이

루어지고, 휴대폰 보급 및 사용 증가와 시장 활동의 증대 등을 통해 외부정보와 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DVD, USB, 태블릿 PC 등을 통하여 한국의 영화·드라마, 가요 등을 접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변화·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소득 불평등에 따라 계층구조가 변화하고 사회적 이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 이전에는 계층간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장사, 소토지(화전) 등 사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계층간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부분적이거나 계층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절도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권력층의 경우 권력남용과 부정부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이탈 행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상 변화는 아직까지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무상교육 등 북한이 선전하는 것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를 이해시킨다.

북한의 학교와 북한학생들의 생활을 알게 하고 우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북한의 교육은 “주체형의 인간 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체제 순응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최고지도자 등 지도층에 절대 복종하고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간형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포괄한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전해왔으나 수업료만 없을 뿐 교재 및 학용품을 개인이 구입해야 하며, 연료 등 각종 경비를 부담해야함에 따라 무상 의무교육은 선전과 달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 등이다.**

북한은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교과 수업 외에 청소년 조직 활동과 방과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고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후에는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 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도 북한이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특히, 영어는 소학교부터 정규교과로 지정하는 등 영어의 비중이 높다.

**3) 북한의 문화**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경우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이해시킨다.

남북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전통적 민족문화를 변질시켜 왔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명분으로 북한의 사회체제에 부합하는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왔다.

북한은 설이나 추석 등 전통적 민족 명절보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 헌법절을 중시하는 등 북한 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 전통이 왜곡되어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도 심화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문화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각급 학교 및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가 있으며, 이들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및 노력동원 장려 활동을 주로 한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4) 북한 주민의 인권**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한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한 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08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UN 기구를 유치하였고, 2016년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통과되었다.

### 3 통일환경의 이해

#### 가. 국제정세의 변화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 안보 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다차원적, 복합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하에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국제문제를 두고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세이다. 한편,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 등에서는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오늘날 국제질서의 모습은 다극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이슈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조정역할과 함께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제 어떤 나라든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간 합의와 공조가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호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힘의 우위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와 주요 국가 간 상호경쟁과 협력이 교차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다자주의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력과 국력 강화를 바탕으로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동북아는 이념 대립의 지역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는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한반도 통일 환경은 국제 질서와 정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21세기 국제정세는 한미 동맹의 발전적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협력의 확대,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이들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우호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통일정책

### 가. 우리의 통일방안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발표된 이후 보완·발전시켜 1994년에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남북한 간 갈등과 협력구조 관계를 사실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지시킨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설명하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

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 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 선언을 통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수용하며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9월에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정치적 통합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 민족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1994년)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회담 직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이어졌다.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

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하여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해군 사이의 교전(제1·2차 연평해전),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합의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 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및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2008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2009.8.15)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남위협과 비방으로 일관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 조치'를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소극적 분단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2010.8.15)하고, 통일재원 마련과 국민들의 통일 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포용, 통일외교 강화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관되고 원칙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 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초 및 구체적 정책구상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시킨다.

우리정부는 평화통일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정책의 수립을 통해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설명한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

게 대응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구축, 그리고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시기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 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 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했으며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러한 정책 구상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다.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이다.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다져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는 한편,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추진이다.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에 바탕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

대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하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고,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발굴사업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치는 등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정부는 원칙에 맞게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15년에는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촉발된 남북간 긴장상황 해소를 위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개최하고, 「8.25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또다시 2016년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응징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초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의 길로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5 통일을 위한 과제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별 통일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차원의 과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통일미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통일역량 강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통일문제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통일한국을 위한 출발점은 사회 구성원 간에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조차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통일의 과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 동포의 행복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 존중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사회 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성숙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가 될 때 북한 동포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

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정전 상태도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교류·협력은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 주민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은 단순히 물자만 오가거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은 남북 간 신뢰증진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통일준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 효과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평화통일의 비전과 목표 하에 질서 있고 내실 있게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한반도 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통일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역내 경제협력의 증진 및 경제이익의 확대 등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 Part 3 부 록

-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 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 1 오두산 통일전망대

#### 가. 개요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 임진강(강폭 460m)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
  - 개성직할시 관문군 관산 지역의 주민과 인민군 등 조망 가능
  - 각종 전시자료와 북한 영상실 구비

#### 나. 관람안내

(1) 관람시간 \* 4월~10월 무휴, 11월~3월 매주 월요일 휴관

- 09:00~17:00 : 3월~10월
- 09:00~16:30 : 11월~2월

#### (2) 관람내용

- 북한전시실(북한의 어제와 오늘, 북한정보검색코너)
- 북한생활체험장(살림집, 교실)
- 개성공단 생산물품
- 2층 북한영상실
- 육안 및 망원경으로 북한지역 조망

#### (3) 교통편

- 승용차
  - 강변북로 → 자유로, 올림픽대로 → 행주대교 → 자유로 → 오두산 통일전망대

- 구파발 → 통일로 → 금촌(통일동산)

#### • 대중교통

- 열차 : 경의선(서울역 → 금촌) 이용 시 금촌역 하차 후 036번 버스 이용
- 버스 : ① 2호선 합정역(2번 출구에서 2200번 버스를 이용 성동 4거리 하차 도보 10분, 통일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이용  
② 서울역앞(9709번, 909번) → 금촌 → 마을버스 이용(1-2번, 1-3번)

(4) 안내전화 : (031) 956-9600

### 2 지역 통일관

#### 가. 개요

- 국민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및 올바른 북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지역에 통일관을 설치, 운영
  - 북한실상,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관련 자료 등 전시

#### 나. 전시실 구성

-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현황자료를 담은 전시 패널, 북한주민 생활용품 등 전시(살림집, 교실)
-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남북공동생산물품 등 전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북한영화 및 북한위성방송 관람
- 특수자료실 : 북한관련 서적, 노동신문 및 북한잡지 등 전시

## 다. 관람안내

### (1) 관람시간

- 11월~2월 : 09:00~15:00
- 3월~10월 : 09:00~18:00

\* 각 지역 통일관 사정에 따라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 (2)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 신청
- 문의전화 : 각 지역 통일관 안내전화 참조

## 라. 지역 통일관 현황

지역	위치	개관일	연락처	휴관
고성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내	'88.06.16	033)681-0885	연중 무휴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96.08.14	033)481-9021	매주 월
철원	강원 철원군 철의삼각지	'90.12.15	033)450-5558	매주 화, 명절 연휴, 신정, 어린이날
인천	인천 남구 수봉공원내	'94.12.15	032)868-0113	매주 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내	'92.09.08	031)945-3171	4~10월(무휴), 11~3월 (월 휴관)
대전	대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내	'01.08.11	042)866-5046, 5164	매주 월
청주	충북 청주시 청주랜드내	'93.02.23	043)2256-5050	매주 월, 명절

광주	광주 서구 화정2동	'89.03.10	062)385-1301~2	매주 월, 토 휴관
부산	부산 부산진구 자유회관내	'89.01.30	051)808-7960~3	연중 무휴
경남	경남 창원시 자유회관내	'98.04.29	055)282-2332~3	연중 무휴
제주	제주시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064)751-01091~2	매주 일, 명절 연휴
충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07.04.05	041)881-1212	매주 일, 명절 연휴
서울	서울시 구로구 궁동 35번지	'08.10.29	02)2613-5556	매주 일, 공휴일

## 3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 가. 개요

- 201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미래 체험시설
  - 통일 체험연수를 통해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편익 등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
  - 청소년들이 건전한 통일관과 안보관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 프로그램과 안보·역사 현장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나.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 주요 시설 : △통일미래체험관(문화·관광·물류·자원 영역, 20여개 체험 아이템) △생활관 △체육관 △식당 △가족 빌리지 △축구장 △야외공연장 등
- 수용인원 : 최대 520명(생활관 472명, 가족 빌리지 48명)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 현재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교 및 단체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실내 프로그램(22개) : △한반도 퍼즐 △WE, 한마음 콘서트 △통일미래관 체험 △통일미래 도시건설 △통일골든벨 △통일 캐릭터 만들기 △특종! 통일뉴스 △나는야, 북한 시장 △북한 음식 만들기
  - 실외 프로그램(1개) : 한반도 투어링
  - 통일안보현장 견학(1개소) : △판문점 △도라산역·전망대 △태풍·열쇠·상승 전망대 △백마고지 △노동당사

#### 다. 이용 안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 : [unifuture.unikorea.go.kr](http://unifuture.unikorea.go.kr))

- 이용 신청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신청 : 031-839-7932,  
uni-future@unikorea.go.kr
  - 대관 신청 : 031-839-7925, unification@unikorea.go.kr
- 교통편
  - (자가용) ①의정부(3번국도) : 양주시청 > 덕계리 > 덕정리 > 동두천 > 소요산 > 초성리 > 한탄강 > 전곡 > 군남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②서울(자유로) : 파주문산 > 적성(37번) > 전곡 > 군남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전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경원선으로 환승, 전곡역 하차 후 택시 이용(20분)
  - (버스) 지역별 시외버스(성남 또는 의정부 터미널에서 3300번)나 노선버스를 이용, 전곡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4. 도라산역·도라전망대

### 가. 개요

- (도라산역) 파주시 장단면에 위치한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인접해 있으며, 부터 북한지역 판문역까지 거리는 7km, 개성역까지는 17km에 불과
  -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되었고, 2002년 4월 개통
  - 2003년 6월에 남북 철도 궤도를 연결하고, 2007년 12월부터 문산역에서 개성공단 입구의 판문역간 정기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졌음.(화물열차 운행은 2008년 12월부터 중단)
  - 도라산역 인근에는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물류센터,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전망대 등이 위치
- (도라전망대) 파주시 군내면에 있으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바로 접해 있음.
  - 도라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기정동(비무장지대 내 마을), 금암골(협동농장)과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시가지 일부 및 김일성 동상 등을 바라볼 수 있음.
  - 전망대 근처에는 북한이 남침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넘어 435m 지점까지 파내려오다 1978년 우리측에 의해 발견된 제3땅굴이 위치

### 나. 견학방법

#### (1) 교통편

- ①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순회) 이용
- ② 열차를 이용하여 도라산역 하차, 도라전망대·제3땅굴 연계관광 셔틀버스 이용
- ③ 30인 이상 단체로 자체버스 이용

## (2) 출입절차

-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진각 관광지 또는 임진강역에서 출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진각 DMZ관광매표소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출입신청
  -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경우) 임진강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

## (3) 휴무 : 월요일 및 주중 공휴일

# 5 임진각

## 가. 개요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임진각은 남북 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임진강변에 개발, 옥상에 전망대가 있음.
  - 실향민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과 조상에게 배례하는 망배단, 정전협정 체결 후 포로들이 남쪽으로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 등이 있음.
  - 임진각 옆 임진강에는 경의선 철도 교량 하나가 복구되어 있으며, 경의선 철도는 임진강 철교와 도라산역을 거쳐 북측의 판문역으로 연결되어 있음.
  - 그 밖에 6.25전쟁 전적 기념물, 경기평화센터, 평화누리 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
    - ※ 자세한 내용은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http://tour.paju.go.kr))를 참조하거나, 임진각 관광안내소(033-953-4744)에 문의

## 나. 교통편

- 파주 문산 터미널에서 임진각까지 시내버스 운행
- 철도 이용 시 임진각역에서 하차, 도보(10분)로 이동

# 6 판문점

## 가. 개요

-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 온 통로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
  -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내에서 유엔군사령부측과 북한측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관할
  - 군사분계선 남쪽 구역에는 남북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연락사무소(우리측)가 소재한 '자유집', 남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으며, 북쪽 구역에는 북측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음.
  - 판문점 근처에는 남과 북의 민간인 마을로서 각각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기정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음.

## 나. 견학신청

- 판문점 견학은 월~토요일에 할 수 있으며, 견학 희망자는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신청하고,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
  - 학교, 정부허가법인, 공무원 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031-950-9200)에, 그 외 일반인은 국가정보원 안보상담센터(국번 없이 111)에 신청



- 접수처는 30~45명의 단체 견학을 주선하므로,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단체 구성 등에 관해 접수처와 협의
- 판문점 방문에는 약 90분이 소요(브리핑 30분, 견학 60분)되며, 방문자는 신분증 휴대, 단정한 복장 착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서류 양식, 방문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회담 웹사이트(dialogue.unikorea.go.kr)를 참조하거나 접수처에 문의

## 7 북한자료센터

### 가. 개요

#### (1) 설립 목적

- 1988년 정부의 7.7선언에 따라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1989년 「북한자료센터」를 개설
  - 이전까지 엄격히 제한해 오던 북한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 시설

- 국립중앙도서관 5층, 연건평 300평(서고포함) 규모에 자료열람실, 북한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영화상영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통일·북한 관련 자료를 제공

#### (3) 소장자료

- 북한자료 3만여건
  - 각종 연감, 문학서적, 백과사전, 교과서, 각종 신문, 주간 잡지, 월간지, 계간지 등
  - DVD/비디오, 마이크로필름 등

- 통일·북한 관련 자료(국내외 자료 7만여건)
  - 통일 및 남북한 관련자료, 북한실상 및 동향 자료, 한반도 주변정세 관련 해외자료 등

#### (4) 주요 서비스

- 통일·북한자료 자료 이용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e-book 제공(통일백서 등 통일부 발간물)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 모바일 사이트 주소 : <http://munibook.unikorea.go.kr>
- 북한 영상자료 시청, 북한실상설명회 및 북한영화상영회 개최

### 나. 이용안내

#### (1) 위치 및 교통편

- 국립중앙도서관 5층(서초구 반포동)
- 지하철 2호선(서초역 6번 출구), 7호선(고속버스터미널역 5번출구)

#### (2) 이용시간

- 평일(월~금) : 09:00~18:00
  - ※ 2째, 4째 월요일, 토·일요일은 휴관(국가공휴일 포함)

#### (3) 문의 전화 : (02)730-6658, (02)720-2429

#### (4) 홈페이지 : <http://unibook.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2015.12.31

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이해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영문판) 통일문제이해	2015		해외공간 · 통일 교육위원 등
	북한이해	매년 발간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북한의 교육과 문학 · 예술,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을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영문판) 북한이해	2012		해외공간 · 통일 교육위원 등
학교용 교재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 (초등용)	2015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삽화 및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움	초등학생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 (중등용)	2015		중고등 학생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북한, 도시로 읽다	2015	북한의 건축과 도시를 분석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	교사 및 일반인
	북한에서의 한류현상	2015	최근 두드러지는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을 분석하고 북한의 변화 전망 및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공	
	(영문판)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2015	북한경제의 기본 틀인 계획경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해외공간 · 통일 교육위원 · 한국 학교 등
	(영문판) 북한의 양면성	2015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북한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보이는 모순적인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영화로 보는 통일이야기	2014	분단과 통일 소재의 영화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통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한 시사점 제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2014	북한의 교통실태와 대외교통협력, 남북 교통협력 현황과 과제 등을 설명	교사 및 일반인
	통일과 인문학	2014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소통, 치유, 통합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	
	(영문판)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4	북한 주민의 변하는 모습과 북한 당국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비교하여 고찰한 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	해외공간 · 통일 교육위원 · 한국 학교 등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영문판)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4	북한 여성의 가정 · 경제 · 사회 영역에서의 일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여성의 생활과 역할, 의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여성의 생활상 설명	해외공간 · 통일 교육위원 · 한국 학교 등
	(영문판)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2013	탈북 지식인이 북한에서 체험한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사회현상 등 설명	
	(영문판) 통일필요성 재인식	2013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북한의 양면성	2013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북한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보이는 모순적인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북한경제의 기본틀인 계획경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2012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준비 노력을 구체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2012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체계 형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하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 체화, 통일과정에서 통일준비와사회통합에 기여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2012	탈북 지식인이 북한에서 체험한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사회현상, 권력집단 등 설명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상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북한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강성대국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 강성대국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2012	FTA와 남북관계,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 FTA의 통일에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북한의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조망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북한 여성의 가정·경제·사회 영역에서의 일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의 여성의 생활과 역할, 의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여성의 생활상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북한 주민의 변하는 모습과 북한 당국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비교하여 고찰한 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1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의 배경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기반 구축과정에 대해 설명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010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통일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 제시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	미래를 위해 열린 공간인 DMZ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북한의 대남전략	2009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와 노선, 전개 양상 및 향후 전망 등 설명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 북한의 문화재 현황, 그리고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방안 전망	
	북한의 체육실태	2008	북한의 체육정책과 선수양성, 국제체육교류 실태 등을 정리하고 남북한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	북한의 관광환경 여건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 현황과 향후 추진할 예정인 백두산 관광의 잠재성 평가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및 분야별·시기별 입법 동향 등을 정리하여 설명	
	북한의 의료실태	2006	북한의 의학체계나 의학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의료실태를 소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 교류 전망	2006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 교류의 현황 소개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2006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대기·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실상, 그리고 남북한 간의 환경부문 교류 협력 전망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2006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북한의 통일정책, 남북관계와 북한 실상,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문제 등 설명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2006	북한과 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 및 북한내 일부 지역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실상을 설명	
	북한 과학 기술의 이해	2006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체계·수준 등 최근 변화상,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 현황 설명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북한의 정보화 수준의 각 부문별 현황과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남북한 IT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방안 고찰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북한법을 보는 방법 및 북한법의 이중성과 허구성 분석	
	김정일 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및 시장경제의 부분적 경험이 교육부문에 미친 영향 분석	
	남북한 IT용어 비교	2005	남북한 IT용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설명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하였나	2005	분단 이후 상반된 체제에서 형성된 남북한 예술의 차이점과 남북한 예술교류의 필요성을 미술중심으로 설명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2005	북한의 역사관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을 비교 설명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이해	2005	남북한 관계의 변화상을 법해석학적 접근과 법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분석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전략을 모색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교류협력을 이루어 가는 남북연합의 모습을 유럽 통합과정에서 조망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대북협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남북 협상문화의 변화를 소개	
참고 자료	남북관계 지식사전 (중보판)	2015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용어 232개를 사전 방식으로 구성하여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북한지식사전	2013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용어 242개를 사전 방식으로 구성하여 설명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1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용어 207개를 사전 방식으로 구성하여 설명	
	통일달력	매년 발간	통일 및 남북관계, 북한 관련 기본사항들을 수록하여 부내 업무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영문판 영상	(영문판)아리랑	2015	아리랑으로 하나 되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화합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메시지 전달	해외공관 · 통일 교육위원 · 한국 학교 등
	(영문판)자원전쟁	2015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경제대국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통일의 현실적 이익과 필요성을 설명	
	(영문판)희망의 새 시대	2015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상을 제시	
	(영문판)진돗개와 풍산개	2014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영문판)대륙열차	2014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재로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	
	(영문판)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	2013	훈이와 건이가 미래의 통일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백두산 스키장과 관문점을 방문하면서 통일 후의 모습을 느끼는 이야기	
	(영문판)One Korea	2013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 남북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 소모적 외교전 등 두 개의 코리아 현상의 통일 필요성 실감하는 내용	
공감영상	비어있는 묘	2015	안중근 의사라는 역사적 인물의 유해 송환을 소재로, 남북 협력 및 통일의 필요성 환기	초등학생
	유연	2015	재일동포 정조문의 문화재 수집과 보존 활동을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중학생
	뽀로로와 친구	2014	뽀로로와 친구 크롱의 화해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이 협력하면 희망찬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
	DMZ 수달의 꿈	2014	DMZ의 철조망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수달의 삶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표현	초등학교 고학년

공감영상	아리랑	2014	아리랑으로 하나 되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듯이 아리랑의 화합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메시지 전달	중학생
	자원 전쟁	2014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기술 결합을 통한 통일의 현실적 이익과 필요성을 설명	고등학생
	진돗개와 풍산개	2013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의 사례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초등학생 (1-3학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2013	백령도에 사는 점박이물범의 시선으로 실랑민의 아픔을 이해하여 물범처럼 자유롭게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초등학생 (4-6학년)
	고인돌	2013	고인돌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을 이해하고,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 '조화'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뤄야 함을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중학생
애니메이션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학생
	수상한 할머니	2015	고향인 평양에 가 보고 싶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 전달	초등학생
	하룻밤의 꿈	2015	저승사자를 통해 6·25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중학생
	구름빵의 백령도 여행기	2014	인기 애니메이션 <구름빵>을 소재로 한 주인공 흥비와 흥시의 백령도 방문기	초등학생
	55년만에 부르는 이름	2014	6·25전쟁 당시 남편과 헤어진 할머니의 사연을 소재로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달	중학생
	구름빵의 비무장지대 나들이	2013	인기 캐릭터인 구름빵을 이용한 초등용 애니메이션으로써 비무장지대와 그곳에 갇힌 동물들의 사연을 통해 통일필요성을 제시	초등학생 (1-3학년)
	호랑이의 기상	2013	백두산 호랑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이들과 함께 통일된 대한민국을 여행하면서 통일한국의 기상을 보여주는 3D 애니메이션	초등학생 (4-6학년)
	편지	2013	편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분단의 상황을 표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샌드 애니메이션	중학생
	더 큰 나라 더 밝은 미래	2013	통일을 찬성·반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랩을 통해 랩배틀을 벌이는 고등학생용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고등학생

애니메이션	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	2012	훈이과 건이가 미래의 통일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백두산 스키장과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통일 후의 모습을 느끼는 이야기	초등학생 (3-4학년)
	우리는 친구	2012	대한이가 공간이동을 통해 북한의 순철이를 만나면서, 북한의 학교생활을 체험하고 순철이와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	초등학생 (고학년)
	통일로 가는 기차	2012	해진이가 시간을 넘나드는 기차를 타게 되면서 분단으로 인한 단점과 통일로 인한 장점을 체험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야기	중학생
	희망을 찾아 온 사람들	2012	해진이가 탈북청소년인 윤미로부터 탈북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일을 바라는 이야기	
	해미의 통일캠퍼스	2012	통일이 된지 10년 후 남한 출신의 해미와 북한 출신의 창준이가 평양대에서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통일의 편익을 깨닫고 서로 이해한다는 얘기	고등학생
	해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2009	학생들의 도움으로 탈북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	
	가자미의 눈물	2008	6·25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해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대화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설명	초등학생 (저학년)
	해미의 행복통일한국	2007	통일된 한국의 미래 모습을 설명	고등학생
새(The Bird)	2006	6·25전쟁으로 조류학자이던 아버지와 생이별하면서 이산가족이 된 주인공이 남쪽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조류학자로 성장하여 북쪽에 있는 아버지와 교감한다는 이야기	중학생	
뮤직 비디오	모두가 하나(가제)	2015	한반도 통일을 '새 친구를 사귀는 것'에 비유, 율동과 가사 반복을 통해 통일 메시지 전달	초등학생
	통일 HEY YO	2015	밝은 멜로디와 반복되는 통일 댄스를 통해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	중고생
	너를 그리다	2015	2014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통일노래부문 우승팀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	
	통통통 (뮤직비디오)	2014	'통통통'이라는 가사 반복, 서로 말과 뜻이 통한다는 내용과 즐겁고 희망적인 통일 이미지 전달	초등학생
	상상 속 너에게 (뮤직비디오)	2014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동경하는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으로, 함께 화합하여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는 내용의 감성형 뮤직드라마	중고등학생

뮤직 비디오	통일기차	2013	통일이 되면 통일기차로 남과 북의 분단선을 넘어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의 초등용 뮤직비디오	초등학생
	하나된 미래	2013	분단의 아픔과 통일 미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표현하고 남과 북이 화합을 이루면 통일 후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중고등용 뮤직비디오	
일반영상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과 전략	2014	북한의 외교사 변천, 버랑끝 외교 전략, 주변4강과의 관계 등 대외정책 방향과 전략을 분석	교사 및 일반인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2014	북한 정권의 수립, 주체사상, 북한정치 체제의 특징 등 정치체제와 통치이념을 분석	교사 및 일반인
기타 교육영상	희망의 새 시대	2014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상을 제시	일반
	통일탐험대	2012	장소들을 찾아가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등을 설명	초등학생 (3-4학년)
	미술사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2012	남북 분단의 현실을 설명하고 초등학생의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	초등학생 (고학년)
	원코리아	2012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 남북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 소모적 외교전 등 두 개의 코리아 현상의 통일 필요성을 실감하는 내용	중학생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중학생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통일된 한국에서 통일 1주년 기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벤처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대결을 한다는 이야기	고등학생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교사 및 일반인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기타 교육영상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중학생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 부자세습에 집착하는 이유, 권력세습의 의미, 김정은 체제의 평가 등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분석	교사 및 일반인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북한 사람들	2011	북한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의 일상을 영상으로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북한여성의 일상을 만나다	2011	북한 여성의 가정생활,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 경제난 이후 북한의 생활과 의식변화 등 설명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북한 관영매체와 북한 내부의 실제모습을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변하는 모습과 북한 당국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영상으로 설명	
	북한시장과 주민생활	2011	북한 시장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시장이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	고등학생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2010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평화통일대행진을 소재로 6·25전쟁의 교훈과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내용	
	북한주민의 하루생활	2008	북한 주민들의 하루일과, 가정생활, 직장, 경제난 이후 생활변화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	2008	북한 학생들의 수업과 방과 후 생활 등 학교생활에 대해 설명	

※ 통일교육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

## 통일교육지원법

[1999.2.5 제정, 2013.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 삭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1999.8.6 제정, 201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016 통일교육지침서

발행일 : 2016년 5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901-7114 FAX 02)901-7029

편집·인쇄 : 현 TEL 02)2273-7142

